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부문 투자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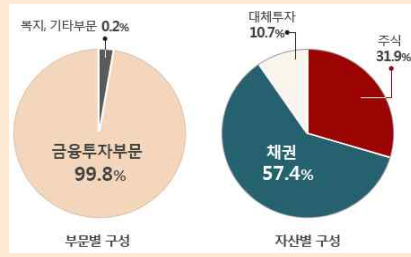
01 주요 내용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매년 10조원씩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발표('16. 5.4.)
 -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통해 향후 10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현 5.2%에서 13.0%까지 올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수용률을 현 10.6%에서 30%까지 올릴 것
-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필요성을 강조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인구구조가 정상화돼야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된다는 주장이며,
 - 연기금을 공공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면 장기적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이 되고, 경제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
-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연기금이 국채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연기금 투자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 정부가 공공투자용 특수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를 발행하면 연기금이 채권을 매입
 - 공공투자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내부수익률이 국채 발행이자 2.14%보다 높아 사업성을 갖추고 있으며,
 - 임대주택의 3.3㎡당 토지매입비를 700만원으로 가정해도 뉴스테이 기준 부지면적 1300㎡, 용적률 300%, 보증금 1000만원, 9평 기준 임대료 월 30만원을 대입하면 내부수익률(IRR)이 4.84%가 나온다는 계산
- 2015년 9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총액 500조 원 중 57%인 287조가 채권에 투자되고, 채권 투자액 중 국채에는 118조원이 투자
 -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2020년까지 1000조원, 2040년까지는 2500조원까지 적립될 것으로 추산돼 국채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지난 4·13총선에서 야당(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더민주-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 규모)
 - 참여연대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자본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보육, 노인요양사업, 공공주택건설 등 사회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
 - 그러나 세계은행 등은 국민연금기금을 '신탁기금'으로 인식하여 기금의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해야 함을 주장하여 연기금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
 - 정치권에서도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민연금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재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음

- 과거 2006년, 2010년에도 LH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하였으나, 국민연금활용에 대한 명분 부족으로 실패하였고,
- 서울시에서도 2012년 연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최소수익률 보 장 수준에 대한 의견차이로 도입 실패

〈現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및 투자방식〉

-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5천3백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 3월 기준 규모가 524조원에 이르고 있음
- 기금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99.8%를 금융투자부문에 운용하고 있으며, 복지부문의 투자는 0.1%에 불과한 수준



-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대한 논쟁, 수익 창출인가? 사회적 임무인가?

① 신탁기금으로서의 연기금

- 세계은행은 공적연금제도는 일관되고 뚜렷한 ‘수익적 임무’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익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

②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연기금

- 연기금의 ‘사회적 임무’ 를 강조하여, 국민들에 보험료 징수를 통해 조성한 재원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사회투자의 성격을 강조
- 장기적으로 고용량의 증가와 조세기반을 강화하여 연금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

- 추가적으로 재원 발굴 및 다양한 투자 영역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활용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 현재 민간금융사가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126.4조원이 적립)의 공적관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은 '15년 기준 590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가입률은 53.6%이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민간금융기관의 투자 수익률은 '15년 기준 3.26%(국민연금, 4.6%)에 불과하고, 더욱이 평균 운용수수료가 0.7%에 달하고 있어 일반적 금융상품보다 낮은 수익을 보이고 있음
 - 일정 수준의 운용수수료를 보장하는 것은 민간금융기관에게 특혜가 될 수 있어, 이를 국민연금 기금과 통합하여 정부가 관리하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 퇴직연금기금을 추가하여 규모를 키운 연기금에 사회투자자본적 성격을 강화하여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사회서비스에 투자를 확대

02 경기도 시사점

- 복지사업에 사회투자방식을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방식의 ‘해봄 프로젝트’ 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는 만큼, 연기금과 연계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경기도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의 확대에 연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2015년 지역별 노인학대 신고 현황

6월 15일은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임

- 정부가 제11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앞두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의지를 표명
 -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대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청에서는 올해 최초로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학대발생 시설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예정
- 14일 복지부가 발간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5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12.6%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음
 -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2년 9,340건, '13년 1만162건, '14년 1만569건, '15년 1만1,9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학대판정 사례도 '14년 3,532건에서 '15년 3,818건으로 8.1% 증가
 - 전국에서 신고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인천·서울 순이며, 학대판정 사례가 많은 지역은 경기·서울·부산·경북 순임
 - 대구·광주·전남·제주의 경우 전체 중 학대사례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개정 노인복지법 ('16.12.30. 시행)

** 전국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매년 발표

〈표 1〉 2015년도 지역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전국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대전	강원	광주
학대사례	3,818	428	403	274	167	203	98	259	249
일반사례	8,087	1,150	658	1,042	517	604	198	617	204
계	11,905	1,578	1,061	1,316	684	807	296	876	453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학대사례	207	280	157	105	330	246	340	72	
일반사례	553	343	163	244	594	681	466	53	
계	760	623	320	349	924	927	806	125	

-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 분석결과, 친족에 의한 학대가 여전히 압도적인 가운데 자기방임 및 노-노학대 사례도 증가 추세
 - 학대 유형별로는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방임 사례가 총 622건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하였고, 학대행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령 부부 간 또는 고령 자녀 등에 의한 노-노학대 사례가 총 1,762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
 -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85.8%(3,276건), 생활시설 5.4%(206건), 병원 2.3%(88건) 등임
- 노인학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양성화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
 - 최근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발표('14.10.), 노인보호전문기관 활성화, 학대전담경찰관 배치 등 일련의 노력으로 부분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 아직도 노인학대 경험율(9.9%)에 비해 실제 신고율은 0.5% 수준에 불과하여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 피해사례 발굴이 필요

2. 주요 직능단체 동향

사업명	주요내용
2016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6. 21.(화) 15:00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 대 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 등 약 150명 • 문 의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52-7554)

03 FACT CHECK

노인에 대한 차별, 노인인권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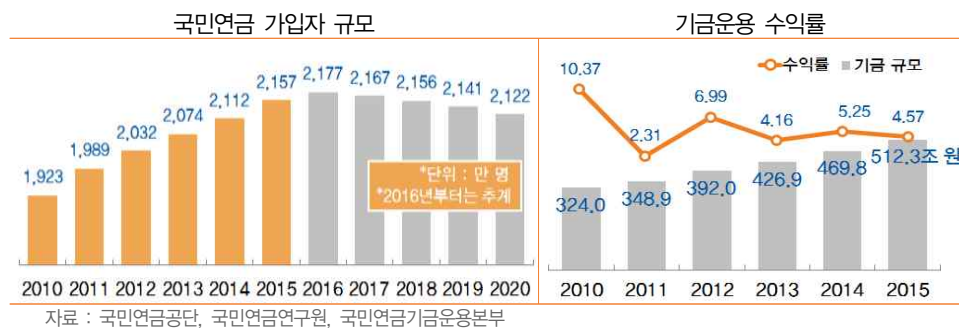
- 세계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열린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에서 연령 때문에 차별받는 노인들을 위한 인권협약이 유엔 차원에서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6.15.)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은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
- 우리나라 노인의 복지 수준은 세계 60위권*의 저조한 수준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하고 노인에게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로부터 소외감과 고립감이 큰 편
 - “내 삶이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하는 노년층의 비율은 35~49세 성인에 비해 70% 수준이며,
 - 삶의 질이 낮고, 다양한 세대와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고 연령 고립적 특성을 보임
- 그러나 노인 인권의 이면에는 노인은 사회의 부담이며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연령차별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
 - 노인에 대한 부정적·차별적 인식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의 사회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연대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노년기에 다른 사람과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인 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접근만이 아니라 연령통합적인 인식제도가 필요
-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보다 광의의 관점인 소득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참여권, 학대로부터 자유, 돌봄을 받을 권리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노년학회 주최

* '세계노인복지 지표(Global Age Watch Index) 2015.

04 통계로 보는 복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와 연기금 운용 수익률



*단위: %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올해 2천177만 명 이후 점차 감소할 전망
 -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활동인구가 줄어들어 2020년 2천122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2015년 국민연금기금은 512조 원 규모이며, 기금운용 수익률은 4.57%
 - 연기금은 5년 동안 188.3조원(63.3%)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수익률의 5년 평균치는 4.70%임

'국민연금 중기재 정전망(2016~2020)'